

소화불량 등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한방병원 붐버

지난달 29일 2단계 시범사업 본인부담률 최대 40%로 줄어 “홍보 부족, 혜택 못 받아” 불만

“한약이 비싸서 걱정했는데 이제 부담이 좀 줄었죠.”

정부가 첩약(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 적용하면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허리 디스크와 기능성 소화불량, 알레르기 비염 등에 처방되는 첩약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첩약 처방을 받는 연령층이 다양해졌다.

시범사업 시작 일주일인 지난 7일 오전 찾은 광주 서구 한 한의원에는 접수를 마치고 진료를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가득했다. 접수처로 가서 ‘해당 질환도 첩약도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게 맞는지’를 재차 확인하는 이들도 있었다.

대학생 김소정(24)씨는 “우연히 알레르기 비염 첩약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걸 알게 돼 처방 받으러 왔다”며 “위낙 한약이 비싸서 매번 고민하다 결국 오지 못했는데 비용 부담이 훨씬 줄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50대 안모씨는 “평소에 소화불량을 달고 살아 주기적으로 한약을 처방받으려 온다”며 “이런 시범사업이 있다는 걸 모르고 왔는데 확실히 저렴하게 한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안도했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단계 시범사업에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됐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도 새로 추가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모두 6개 질환이 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 정해졌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대상 연령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대로 넓어졌다.

대상 의료기관도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졌고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률도 세분화됐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 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광주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광산구 41곳 △동구 18곳 △남구 27곳 △북구 38곳 △서구 40곳으로 총

164곳으로 집계됐다.

시범사업이 실시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지만 사업 참여 기관을 직접 알아야 하는 불편함과 부실한 홍보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모(38)씨는 “이번에 첩약을 처방받은 곳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아니라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혜택이 적용되는 기관을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주변 지인들도 대부분 잘 모르고 있던데 홍보가 더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광주 동구 한의원 관계자는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서 접수 인원 변동이 크게 없다”며 “일주일밖에 안돼서 그런지 따로

홍보 포스터나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따로 공지나 권고사항이 없어 알아보는 중”이라며 “자료나 관련 내용을 전달 받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삼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 동구 어버이날 행사 광주 동구 어르신들이 7일 동구청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임택 동구청장, 김재식 동구의회 의장, 안도걸 국회의원 당선인, 주리에 동구노인종합복지관장과 직원들이 어버이 은혜를 부르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김양배 기자

일자리보조금 수십억원 편취한 40대 징역 7년

가짜 직원 채용 등 31억원 받아

정부의 일자리 보조금 수십억 원을 허위 수령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7일 보조금관리예관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유령회사를 설립해 가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으로 31억원 상당의 각종 일자리 보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공범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일

자리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악용했다. 그는 공범 2명과 함께 유령회사 2곳을 설립해 허위로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미며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약 2억7000만원을 받았다. 필라테스업체 운영자 등 여러 사업자와 결탁해 같은 수법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보조금 10억여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보조금 편취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고, 부정수급액수가 31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 피해 금액 대부분이 환수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성현 기자

직원 사칭해 정부 사이트 계정 탈퇴... 5·18부상자회 前 직원들 고발

보훈부 감사 결과 열람 사이트 해고자들이 직원 행세해 탈퇴 부상자회 “업무방해 혐의 고발”

5·18부상자회 직원을 사칭해 공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공공기관 사이트의 단체 계정을 탈퇴한 전 직원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7일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달 18일 당시 5·18부상자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A씨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5·18부상자회 중앙회와 광

주지부 직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당했던 B씨 등 피고발인 2명이 공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의 부상자회 공식 계정을 불법으로 탈퇴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부상자회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후, 그 결과를 지난달 17일 한 정부 사이트를 통해 부상자회에 통보했다.

당시 부상자회 측은 해당 문서를 열람하기 위해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다 회원 탈퇴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부상자회는 관리업체에 회원 탈퇴 경위를 문의한 결과, B씨 등 피고발인 2명이

관리업체에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는 등 부상자회 직원인 척 행세하며 부상자회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었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부상자회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이 감사 내용을 빼돌리기 위한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사이트 계정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권한 없는 자들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경찰 수사 단계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